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야천변 2길 6번지

2017년 4월 3일 월요일 (음 3월 7일) 제177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도내 시민단체, 박근혜 구속 “환영”

도내 정치권, 민주 보수간 입장차

민주당 “당연한 결론”
국민의당 “결정 환영”
바른정당 “아쉬움”
자유한국당 “안타까움”

시민단체들 “적폐청산의 시작”

참여자치전북연대 “지극히 당연한 상식 확인한 것”

민주노총 “민주주의 역사 크게 한걸음 내딛게 해”

친박단체 “진실의 패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도내 정치권과 사회단체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박 전 대통령은 구속은 법과 원칙의 엄정함을 기준으로 할 때 당연한 결론”이라며 “구독안의 수사 상황과 법의 형평성, 범죄의 중대성을 보아도 구속 결정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결정이 나기까지엔 촛불의 힘이 컸다”며 “자발적으로 모인 국민 개개인의 작은 정치력이 한 광장에서 거대한 빛의 강이 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 집단들에게 철퇴를 가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늘의 역사적인 구속 결정이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 길은 적폐 청산과 사회 개혁에 있고 이것만이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며 정권교체가 그 시작”이라며 “광장을 지켜왔던 그 뜻을 받들어 민주주의 역량을 성장시켜나가 전북 북 찾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란 역사적 사건에 대해 오로지 법과 원칙만을 따른 검찰과 법원의 용기있는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5월 집미 대선은 누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견인할 것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반복되는 전직 대통령 문체부의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4차 산업 시대에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 것인지, 고사하고 있는 지방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 자리가 왜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제 국정 농단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뒤집은 초유의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으로 첫 매듭을 풀게 됐다”며 “앞으로의 국정농단의 해결은 법과 원칙이란 위대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맡기고, 이제 각 정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어떠한 정치적 선행을 거부한다”며, “이제는 집미 대선이 미래를 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근혜의 구속은 시민들이 촛불광장에서 외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확인한 것이며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의 구속으로 이제야 ‘적폐청산’이 시작됐다”면서 “이제 국정농단 사건을 더 철저히 밝히고 그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주권자의 힘으로 통치자를 끌어내리고 수감에 이르게까지 한 것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크게 한 걸음 내딛게 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전북본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봄을 이끌어 낸 촛불 광장의 모든 날이 좋았다”면서 “다시는 주권자 위에 군림하며 사익을 취하는 통치자가 탄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 전북연맹도 박근혜 구속은 민중이 이뤄낸 적폐청산의 시작이라며 환영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반면 바른정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불구속 재판의 여지는 없었는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으며, 자유한국당은 “참으로 안타깝다. 다시는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친박단체들도 “진실의 패배”라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했다. /인재용 기자



세월호를 실은 반점수선 '화이트 마린' 호가 지난달 31일 목포 신항에 도착한 가운데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전주 음식물쓰레기 협상 타결 “주민지원기금 추후 인상”

전주시와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주민지원협의체는 리사이클링타운과 관련해 주민지원기금 인상 등에 관한 이행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들은 이날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해 올해부터의 반입 수수료분은 폐촉법과 시행령에 정한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10%) 이내에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의를 봤다.

다만 반입 수수료분 규정을 조례에서 정할 때까지는 고정액으로 매년 6억원을 지원하고, 인상 시기 등은 추후 시와 협의체가 협의해 결정

하기로 했다. 앞서 주민지원협의체는 폐촉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을 폐기물 반입량에 비례한 정산제(10%)로 지원하거나 6년 후에 수수료 50% 인상을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주민지원기금 인상’을 놓고 시와 협의체간 마찰이 빚어지면서 리사이클링타운 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일단은 고정액으로 매년 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기금 인상 시기 등은 향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 쓰레기 문제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원불교 교정원 이전 대책 고심

정현을 익산시장, 중앙총부 방문 재검토 요청

원불교 교정원 이전설이 확산되자 중앙총부가 위치한 익산시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달 31일 원불교 중앙총부를 방문해 교정원 이전에 대한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원불교 성지인 익산에서 교정원이 서울로 이전할 경우 시민의 공허함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 원불교 이전은 지역의 중심축이 없어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이전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불교 측은 서울에 건설 중인 글로벌 회담에 교정원이 이전하는 것은 확정된 사안 이 아니라

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지인 익산을 두고 원불교가 떠날 이유가 없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일부 행정부서가 이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원불교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며 “원불교 본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시민들은 큰 충격과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전이 추진되지 않도록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원불교는 1916년 소태산 박종빈이 창시했으며 불교, 기독교, 천주교와 함께 우리 사회의 정신을 이 끌어나가는 종교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 소녀상 건립 본격 시동

익산 ‘평화의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는 오는 4월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소녀상 건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발대식은 익산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평화의소녀상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건립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소녀상을 통해 가슴 아픈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을 이어가고 시민들에게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전하고자 건립된다.

추진위는 지난 2월부터 약 30여명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추진위는 발대식을 기점으로 주말 거리홍보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지평선중·고등학교는 입시전형과정에서 어떠한 부정이나 비리도 없었습니다.

지평선중·고등학교는 마음공부와 인문학 중심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힘써 왔습니다. 특히 원불교 교단의 적극적인 후원과 교직원들의 밤낮 없는 헌신, 열정,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는 지평선만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의 과장되고 왜곡된 보도와 그에 따른 교육청 감사결과로 인해 그동안 정성 들여 가꾸어 온 학교의 명예는 일시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실추된 명예와 교육공동체의 꿈을 지켜나가고자 부득이 학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아래와 같은 호소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평선중·고등학교는 규정과 입학전형 요강에도 없는 학교에서 임의 및 자체 운영하는 사정회를 통해 합격자를 선정했고 이 과정에서 합격자의 순위를 바꾸었다”는 교육청 감사 결과에 대해 학교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지평선중·고등학교 ‘입학사정회’는 전형위원인 학교장을 포함, 전 교사가 함께 참여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합의로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이 입학사정회는 어느 날 갑자기 학교의 편익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개교 이래 지금까지 지평선중·고등학교의 교육이념에 동의하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적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찾아내고 돌보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기구입니다.

대안학교는 일반학교와 달리 학교의 개교 이념과 특성에 동의하는 학생과 학부모로 구성됩니다. 타 시·도에서 운영되는 대안학교는 학생 선발을 위해 1박2일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 학생들을 살필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고 선발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면접을 허락해 학부모의 교육관을 선발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청은 대안학교 취지에 맞는 학생 선발을 위한 학부모 면담 등 지평선학교의 입학전형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념과 같은 감사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지평선중·고등학교는 입학전형과정에서 어떠한 부정과 비리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학교가 개교를

하면서부터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해 오던(개교 이래 14년 동안 교육청으로부터 수차례의 감사 및 점검, 컨설팅 등을 받으면서도 단 한 번의 지적사항도 없었던) 사정회를 학교와 반목 한 일부 교사들(전교조 교사)이 의도적으로 농취해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마치 학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합격자를 바꾼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발생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학교의 전통과 명예는 크게 실추되고 학교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학부모와 학생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교조의 주장에 휘둘리는 전북교육청의 편파적인 행정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름다운 휴전축, 학교 중심에 자리한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학생들, 편안한 얼굴로 밝게 인사하는 학생들, 자녀들의 생활공간을 함께 가꿔주시는 학부모님들의 모습이 지평선학교였습니다. 학교의 교문을 열던 그때 그 첫 마음을 놓지 않고 교직원들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학생들이 지금처럼 밝고, 밝고 훈훈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오로지 학생을 위해 올바른 대안교육을 제시하고자 정직과 진실을 바탕으로 성심을 다해왔습니다. 그런 결과 지평선중고등학교가 전북교육의 자랑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찾는 대한학교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입시부정과 비리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착잡한 심정만 듭니다. 2개월에 걸친 유래 없는 긴 감시기간 동안 처음 언론에서 언급했던 ‘권력’, ‘비리’, ‘특혜’, ‘금전거래’ 등의 말은 이제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이 얼마나 ‘침소봉대’ 됐는지를 잘 알려주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지평선중고등학교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하지 않은 이번 교육청의 감사결과를 유감으로 생각하며, 계속되는 언론 보도로 소용돌이쳤던 학교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아 다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교 내부의 문제를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밖으로 표출되게 해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하는 지평선중고등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4월 3일

학교법인 원진학원 (설치·경영학교 지평선중·고등학교)